여성정책동향

•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2/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2010 연구과제 소개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 및 통합방안 연구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 KWDI 동정 (2010. 4 - 6)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2/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6.2 지방선거로 2010년 2분기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한 2분기는 여성 연예인 인권문제, 스폰서 검사문제 등 성상납/성매매의 문제가 공론화되는 시기였다. 2010년 2분기에 이슈가 된 여성정책을 정리해본다.

6.2 지방선거, 여성 의무 공천제 본격 시행

6.2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수는 전체 후보자 9,665명 가운데 17.0%(1,643명)으로, 2006년 11.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후보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 공천으로 규정한 선거법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여성 후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 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6.2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성 후보 공천은 한나라당 19.4%, 민주당 19.3%, 자유선진당 16.3%에 그쳤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43.2%, 42.3%로 여성 할당 30%를 지켰을 뿐이다. 여야가 여성 후보 공천 확대 및 의무화를 다짐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1명을 겨우 채운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 후보군의 부족, 여성후보자를 발굴 · 양성 · 공천하기 위한 정당차원의 노력 미흡, 여성 정치인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에 기인한다.

6.2 선거 결과, 전체 당선자 3,991명의 18.7%에 달하는 746명의 여성 정치인이 당선되었다. 특히 26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6명의 당선은 풀뿌리 정치를 통한 여성 참여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정치인 당선비율은 여성 의무 공천제 도입으로 제도적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0-35세 청년층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 36.0%, 여성 60.7%가 여성공천 할당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 수가 남성보다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남성(73.6%)이 여성(92.9%)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심각

지난해 한 여배우의 자살이 성상납과 관련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성 연예인의 인권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 등을 조사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여성 연기자들은 성희롱(31.5%)이나 성폭행(6.5%)과 같은 범죄적 피해는 물론 소속사의 폭언과 성형수술 압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연기자의 55%는 유력인사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스폰서 관계'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상대는 돈 많은 재력가(43.9%), 방송 PD · 감독(38.6%), 제작사 대표(22.8%), 기업인(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연기자의 58.3%는 술시중과 성상납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48.4%가 성접대를 거절한 후 캐스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여성 연기자 지망생들도 성접대 제의를 받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연기자 지망생들은 현역 연기자들에 비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아,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권유받은 경험이 각각 72.3%와 58.7%로 밝혀졌다.

"연기학원을 통해 1년에 수도권 지역에서만 48,000여명의 연예인 지망생이 배출되고 등록되지 않은 영세 군소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지망생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여성 연기자에 대한 인권 침해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연예인 수급구조의 불균형에 있다.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예기획,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의 자격이나 자금 조건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연예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노동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 · 제작자협회 · 매니지먼트협회 · 에이전시협회 등이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개 오디션을 제도화 해 공정한 캐스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여성 연예인이 성접대나 스폰서 관계를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집중해 성접대나 스폰서 관계가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예계와 사회 구조의 문제임을 밝히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개소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센터' 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센터가 여성 연예인들의 성적착취구조를 개선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연예인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검사 스폰서'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는 성상납 · 성매매 문제

지난 4월, MBC PD 수첩이 전 · 현직 검사들의 성상납과 그에 따른 대가성 여부를 고발한 일명 '검사 스폰

서' 사건이 이슈화 되었다. '검사 스폰서' 사건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를 다짐했고, 성매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또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중심이 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사와 스폰서의 유착 실태는 검찰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접대 · 성상납 관행의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난해 '장자연 문건' 에 대한 검찰의 졸속 종결과 마찬가지로 '검사 스폰서' 문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상위원회는 이제라도 '검사 스폰서' 사건을 성매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싼 논쟁

조두순 · 김길태 사건에 이은 김수철 사건의 발생은 아동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야 의원들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 및 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 및 치료법' 은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국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을 오랫동안 공론화시켜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극단적 방법이 성범죄 근절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화학적 거세' 는 '약물 치료' 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성적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것이 처벌의 차원이 아닌 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방의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아동 성폭력 관련 정책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그 기대효과를 균형있고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여성계,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 비판

2010년 1분기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낙태문제가 2분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출산과 양육의 열악한 현실과 현행법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이하 사회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서는 시민단체 · 의료계 · 학계 · 종교계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사회협의체의 목적을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명사랑에 대한 국민인식개선과 사회적 책임' 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는 여성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서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들이 성관계와 임신, 출산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비한 사회제도 등 다양한 낙태의 배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 ·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낙태의 현실을 간과하고 생명존중분위기조성으로 낙태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발상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를 '불법' 으로 규정한 이후 진행된 낙태 논쟁은 찬성/반대, 불법화/합법화, 생명존중/생명경시 등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앞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틀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여성정책의 이념, 추진체계 및 정책 수단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현행법의 '발전론적 시각' 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여성 대상 시책을 유지 ·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각종 성 주류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설치, 국가 성 평등지수 작성 등 여성정책 조정 기능 및 이행수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여성정책기본법' 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 평등' , '성차별'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10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생활공감형 정책 의제 발굴 본격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 '다함께 만드는 세상, 생활체감정책단(이하 생활체감정책단)' 발대식을 가졌다. 생활체감정책단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여성정책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생활체감정책단은 6월 14일 활동을 시작으로 총 15주 동안 생활 속의 녹색, 미래사회와 가족, 일 · 가족 양립, 행복한 노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제2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과 함께 생활공감정책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야간돌봄전담 유치원 운영', '경차택시 운영', '초등학생 등하교 SMS 통보',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 등 '08-'09년 생활공감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당선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모니터단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생활체감단과 주부 모니터단은 현 정부 정책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동시에, 여성이 정책 의제 개발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다. 이러한 정책 의제 발굴 및 평가에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일상적인 삶에 기초를 둔 정책, 여성내부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앞두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특히 MDGs 달성을 위해서 각 목표에 성인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MDGs 첫 번째 목표인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각 나라들은 농업분야에 여성의 참여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존의 성역할에 기반 한 교육에서 벗어나 수의학 · 집유(集乳)기술 · 농장경영 · 사업기술 등을 교육하는 수의학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농촌지역 여성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은 독립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목축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행한 툴킷(toolkit)에는 농 · 축산 · 수산 · 임업에 관한 성별통계 및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 툴킷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기아를 줄이고 농업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MDGs 5번째 목표인 산모사망률 감소와 생식보건 향상을 위해 국제기구는 산모사망률이 높은 아프리카에 피임기구 지원, 조산사 교육, 위생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HIV 모자전염 예방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산모사망률 감소를 위한 전제조건이 성 평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영 문 제 목 : A Study on Re-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Career-Break Women
○ 연구책임자 : 민무숙
○ 공동연구자 : 오은진

OECD 국가중 최하위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자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 가사 ·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후 비경활인구로 남아있는 경력단절여성 집단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5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법' 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위기를 맞아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가능성, 나아가 실직 가장의 증대에 따른 여성들의 재취업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휴먼뉴딜 국정기조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도부터 여성부와 노동부의 공동사업 형태로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회관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77개 기관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로 지정 ·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여성교육훈련의 기능 중심의 기관들을 심층 상담기능의 추가와 함께,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나아가 일 · 가정 양립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재취업지원기관으로의 변신을 유도하여 여성들의 재취업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 2012년까지 100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타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관과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주목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기존의 교육훈련 기관을 재취업 연계 기관으로 강화하는 것이어 현 시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기관들의 서비스지원 방식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첫째,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및 고용보험 DB 분석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이동 전후의 일자리 변화 모습과 취업알선 서비스의 재취업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워크넷 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공공지원 알선 서비스 기관과 여성전용교육훈련 기관의 이용자 및 알선 형태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둘째, 지역 및 기관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자료 및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교육훈련 기관들의 지역내 유관 부서 및 기관들과의 연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새로일하기 센터들의 기관역량 및 담당자 역량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이들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정책이 기관 지원금 위주의 정책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보조금 직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고, 각종 취업알선서비스도 다양한 민간기관에 위탁, 공공부문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환경 속에서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기관들의 기능점검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 및 통합방안 연구

○ 영 문 제 목 : The generation conflict felt by old men and women and suggestions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 연구책임자 : 이수연
○ 공동연구자 : 최인희, 김인순, 조은미

노인이 겪는 세대갈등은 노인의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 경제사회적 참여 정도, 복지나 문화 혜택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타세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타세대와의 생각의 차이나 제도와 문화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을 말한다. 특히 타세대의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사고를 연령차별 혹은 연령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노인 세대갈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는 더 이상 인생의 잔여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0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약 5,19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38.2%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어 노인들이 복지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의 관계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노인이 복지나 시혜의 일방적인 대상이 아닌 나머지 세대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들은 스스로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차별은 무시나 기피, 소외를 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노인들의 우울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녀 혹은 손자녀 세대와는 가족에 대한 기대와 행위양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견을 보임으로써 상호 역할긴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을 둘러싼 견해 차이는 가족 내 세대갈등의 주요원인 된다. 여기에 사회전반의 운영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세대 차이와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현상이며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갈등과 대립은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세대갈등 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노인과 타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노인들이 차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축적되어 사회문제화 되기 이전에 정책적 중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세대의 갈등과 차별, 소외 경험, 타세대의 노인이미지, 그리고 부양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신구 세대갈등의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 영 문 제 목 : Economic Growth Strategy and Job for Women
– Women's Skill Development Policy for Green Growth–
○ 연구책임자 : 김태홍
○ 공동연구자 : 김종숙, 강민정

최근 정부는 단기적인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분야의 세부업종을 육성하여, 10년 후 700조 부가가치 창출과 10년 동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IT, BT, NT 등 첨단기술 제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통신에 기반한 기존의 성장산업과는 다른 인력수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성장산업 지원과 여성인력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수요분석에 기초한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전략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규모와 특성, 국내외 신성장동력분야의 사업현황 및 전망, 그리고 총괄적인 인력양성정책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신성장동력분야의 산업별, 학위 · 전공별 등 세분화된 인력수요와 여성인력양성 규모 및 구조, 전공별 취업분야 등을 분석하여, 양성구조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신성장동력분야의 일자리창출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업분야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작업환경, 일가정 양립 등을 조사하여 여성 진출에 애로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여성인력양성과 취업촉진 방안을 담은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를 개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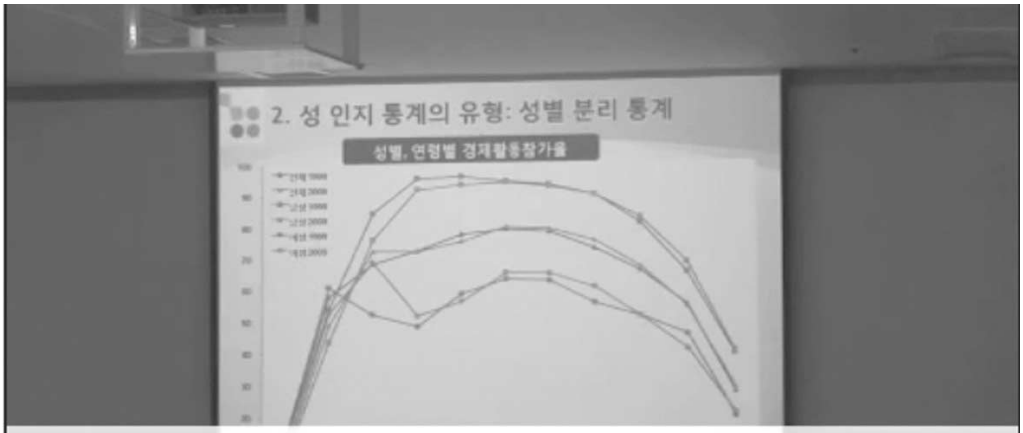
KWDI 동정 (2010. 4 - 6)

■ KWDI 27 NEWS, YouTube 업로드 시작!

본원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각종 행사촬영을 통한 동영상뉴스의 YouTube 업로드를 시작하였다. 행사정보, 행사스케치, 발표자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이 담겨지게 된다. 본 뉴스는 KWDI 홈페이지-KWDI News와 KWDI Newsletter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KWDI 27 NEWS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1차 여성정책포럼] 통계책임관의 성별통계 사무 신설과 향후 정책 과제
http://www.youtube.com/watch?v=lBt5Iy6nwtA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과 김금래 국회의원은 5월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통계책임관의 성별통계 사무신설과 향후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61차 여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0년 3월 31일 통계법에 통계책임관의 성별통계 사무를 신설하는 통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성 인지 통계의 실태와 향후정책과제, 그리고 국가성인지통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패널센터장이
"통계책임관의 성별통계 사무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하였다.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lXYssf8XNjU

청소년 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연합뉴스(사장 박정찬)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주관한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문화 개선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26일(수), 한국정책금융공사 8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실효성 있는 정책추진방안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0년 5월 26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청소년주간을 맞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방안과

■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본원은 개원 27주년을 맞아 2010. 4. 20 “품격있는 사회로의 희망,여성이 만드는 녹색성장 시대”를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유희정 본원 삶의질 전략단장이 “녹색성장 국가발전 전략에서의 여성참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두언(국회의원),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진(중앙일보논설위원), 우기종(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정봉협(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옥선화(한국가족학회장), 최정순(웅진그룹인재개발원장), 박찬희(중앙대 교수), 이공주복(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기념식 개최 및 유공직원 표창

개원 27주년 기념식에서는 기관발전에 기여한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다. 여성부 장관상은 신선미 연구위원이 원장상은 이미정 연구위원과 이인영 행정3급이 수상했다.

▫ KWDI Newletter SPECIAL EDITION 배포

개원 27주년을 기념해 KWDI Newsletter SPECIAL EDITION을 제작 · 배포하였다.

KWDI Newletter SPECIAL EDITION에는 김태현 원장의 개원 27주년 기념인사말, 김영정 초대원장 칼럼, 각계 인사 축하 메시지, 사진으로 본 KWDI 27년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간행물 목록 발간

본원은 여성정책 연구를 본격화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집대성하여 소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 목록〉을 발간하였다. 그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씽크탱크로서, 국가 성 평등 선진화 구현에 기여하며, 일년 단위로 진행되는 기본과제, 시의성있는 연구를 단기간에 수행한 수시과제, 정부부처의 정책요구에 부응한 수탁과제 형태로 발간해 온 간행물이 여성정책 주제별로 총망라되어 있다.

■ 생활체감정책단 발대식 (2010. 6. 11)

본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고자 '다함께 만드는 세상, 생활체감정책단' 을 운영한다. 생활체감정책단 발대식을 6월 11일(금) 본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번에 기획, 진행하는 '다함께 만드는 세상, 생활체감정책단' 은 본원 홈페이지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에 응모한 지원자 중 선정된 1000여명의 패널로 이루어지며, 6월 중순부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 한미교육위원단 방문 (2010. 6. 14)